

2022
2. 28

국토연구원에서 수행한 주요 연구과제의 핵심 내용과 정책제안 등을 압축해 국민께 알려드리고자 하는 발간물입니다.

국토정책 Brief

KRIHS POLICY BRIEF

KRIHS POLICY BRIEF
No. 855

발행처 국토연구원
발행인 강현수
www.krihs.re.kr



참여형 도시계획 확립을 위한 커뮤니티 보드 도입·운영 방안



주요내용

- ① 현행 도시계획 주민참여 제도는 경직적이고 폐쇄적인 구조로 인해 사회적 요구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며, 이로 인해 지역과 거주민에 대한 고려 없이 도시계획이 결정·허가되거나 그에 따른 사회적 갈등이 발생
- ② 도시계획 참여 제도의 문제를 해소하고 참여형 도시계획을 확립하기 위해 ‘커뮤니티 보드(Community Board)’라는 도시계획 관련 주민대표조직의 도입·운영 필요
- ③ 미국의 뉴욕과 휴스턴, 수원시와 세종시 사례를 분석하여 다음과 같은 시사점 도출
 - 주민조직 운영 시에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역할과 권한을 부여하고, 조직 구성과 운영에 대한 명확한 규정을 마련하며, 행정·재정적 지원 체계를 갖추는 것이 중요
- ④ 지자체 차원에서 도시계획·개발 안건에 대한 주민참여를 강화할 목적으로 적정한 공간 범위를 정하여 커뮤니티 보드를 설치·운영할 수 있으며, 이때 ‘권한 부여’, ‘참여 확대’, ‘정보 공유’ 세 가지를 기본 원칙으로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
- ⑤ 커뮤니티 보드 도입 시에는 ① 적정 공간 단위, ② 신설 또는 기존 조직 활용 등의 도입 방식, ③ 대표성 확보를 위한 규모 및 구성 방식, ④ 주요 기능과 역할 분담, ⑤ 효과적인 기능 수행을 위한 운영 방식을 결정하는 것이 필요

정책방안

- ① (중앙정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관련 지침에 커뮤니티 보드 도입·운영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기반 형성
- ② (지방정부) 커뮤니티 보드의 체계적 도입·운영을 위해 설치, 규모, 구성, 주요 기능, 세부 운영 방침 등을 규정하는 조례 또는 지침을 마련 및 효과적으로 시행
- ③ 단기적으로는 커뮤니티 보드에 간단한 자문이나 의견 청취 기능 정도를 부여하여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향후 위상과 역량 향상에 따라 단계적으로 기능 확장

이다예 부연구위원
최정윤 인천대학교 부교수
(국토연구원 前 부연구위원)
김중은 연구위원

1

도시계획 주민참여 제도 현황과 커뮤니티 보드의 필요성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도시계획 수립과정에서 공청회, 주민의견청취, 계획서 열람 등의 주민참여 절차를 시행하여야 하며, 법적 의무는 아니나 필요에 따라서는 주민계획단의 구성과 운영, 설문조사, 주민간담회 및 주민설명회 등의 주민참여 제도를 별도로 진행하여야 함

표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주민참여 관련 규정

구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광역도시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청회(제14조) • 열람(제16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청회) 일간신문, 관보, 공보, 홈페이지 또는 방송 등의 방법으로 개최예정일 14일 전까지 1회 이상 공고(제12조)
도시기본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청회(제20조) • 열람(제22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열람) 시·도 공보와 홈페이지에 30일 이상 게재(제13조, 제16조의3)
도시관리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민제안(제26조) • 주민의견청취(제28조) • 열람(제30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민의견청취) 계획 내용을 둘 이상의 일간신문과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고 14일 이상 열람. 의견서가 제출된 경우 시장·군수 등은 반영 여부를 검토하여 60일 이내 통보(제22조) • (열람) 시·도 공보와 홈페이지에 게재(제25조)
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발행위허가제한지역 의견청취(제63조) • 기반시설부담구역 의견청취(제67조) • 성장관리계획구역 의견청취(제75조의2) 	-

출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동법 시행령 관련 규정을 참고하여 저자 작성.

그러나 도시계획 주민참여 제도는 참여방식, 참여대상, 정보제공 측면에서 한계를 가지므로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어려우며, 이로 인해 지역과 가주민에 대한 고려 없이 도시계획이 결정·허가되는 문제가 발생함

- (참여방식) 현행 주민참여 제도는 계획안 작성 후 의견을 받는 방식이라는 점에서 참여 시기와 형태가 매우 제한적이고, 제시된 의견에 대한 검토 절차나 결과 공개 관련 의무 규정이 없어 충실향 반영이 이루어지기 어려움
- (참여대상) 참여대상이나 규모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이 없기 때문에 공청회 또는 주민간담회를 개최하거나 주민계획단을 구성하는 경우 대표성이나 이해관계를 고려한 효과적 참여가 어려움
- (정보제공) 계획안에 대한 설명이나 정보제공 수준이 미흡하여 일반 주민들의 실질적 참여에 한계가 존재하고, 공청회나 의견청취 절차 등을 진행하는 경우 홍보가 부족하여 참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함

현행 주민참여 제도의 한계를 개선하고 주민들이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도시계획·개발 이슈를 공유하며 영향력을 발휘하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커뮤니티 보드(Community Board)’ 제도의 도입을 제안함

- 커뮤니티 보드란 도시계획과 관련된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주민대표조직을 지칭하는 것으로 대표성이 있고 역량을 갖춘 주민들이 정책 결정과정에 협의 및 자문 형식으로 참여하도록 하는 제도임
- 주민자치와 주민참여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높아지며 주민자치조직의 형성과 운영이 확대되는 추세이므로 도시계획 분야에서도 주민조직 중심의 정책 제안·결정 체계를 구축하고 능동적인 주민참여를 지원하는 것을 검토할 수 있음
- 커뮤니티 보드는 상설 조직이므로 도시계획 전반에 대한 안정적 참여가 가능하고, 공식적인 절차로 구성원을 선발하여 대표성 문제를 해소하거나 해당 조직 중심으로 개별 사안에 대한 이해관계자 의견수렴을 추진할 수 있으며, 행정청과 주민 사이에 위치하여 관련 정보를 상시 공유할 수 있다는 점에서 현행 제도의 한계 극복이 가능함

그림 1 주민참여 제도의 한계와 개선방향에 기반한 커뮤니티 보드 도입 필요성



출처: 이다예 외 2021, 35.

2

국내·외 커뮤니티 보드 유사 사례 분석

도시계획·개발과 관련된 주민조직을 운영함으로써 시민참여 도시계획을 실현하고 있다고 평가받는 국내·외 사례 네 가지를 선정하여 검토하고 성과와 한계를 분석함

미국 뉴욕시 커뮤니티 보드(Community Boards)

뉴욕시 전역 59개 커뮤니티 구역에 각각 설치되어 있는 커뮤니티 보드는 해당 커뮤니티와 관련된 공적 결정 시 주민 의견을 수렴하고 제시하는 주민대표기구

- (도입 배경) 20세기 초반 도시 문제 해결과정에서 커뮤니티 파괴를 최소화하기 위한 거주자의 정책참여 필요성이 높아졌고, 1951년에 커뮤니티계획위원회가 설립된 이후 발전을 거듭하여 현재의 커뮤니티 보드 제도로 정립됨
- (조직 구성) 커뮤니티 보드 소속 위원은 최대 50명으로 임기 2년간 봉사직으로 참여하며, 이 외에도 구역 관리자(district manager)를 비롯한 전담 직원과 지원 인력이 존재함
- (주요 기능) ① 표준 토지이용 심의과정(Uniform Land Use Review Procedure: ULURP) 참여와 커뮤니티 계획 수립 등 도시계획·개발 관련 제안 및 검토, ② 커뮤니티 관련 예산 제안, ③ 기타 커뮤니티 관련 문제 해소 등
- (운영 방식) 법적 근거를 갖는 독립기관으로서 정부로부터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받고 각 기관과 협력하여 업무를 수행하며, 매달 1~2회 공청회와 정기회의를 개최하여 주민들과 안건을 공유하고 의견을 수렴함

커뮤니티 보드는 법적 권한을 갖는 독립기관으로 도시계획·개발, 예산, 서비스 공급 등과 관련하여 주민과 행정의 간접 역할을 수행하고 있지만, 역할에 비해 역량과 자원이 다소 부족하여 어려움을 겪는 경우도 존재함

표 2 뉴욕시 커뮤니티 구역 현황(2021년) 및 도시계획·개발과 관련된 커뮤니티 보드의 주요 기능

	주요 기능	책임 사항
	표준 토지이용 심의과정 (ULURP) 참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 정부가 결정 권한을 가진 토지이용 제안에 대한 의견 제시 - 60일 이내에 제안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하고 의견서 작성
	197-a 계획 수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커뮤니티 구역의 목표와 비전, 부문별 계획 내용 작성 - 해당 지역의 문제 파악 및 해결방안 제시
	시설 입지과정 참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커뮤니티 내 시설 입지와 관리에 대한 의견 제시 - 시설 입지 결정 후 시설 모니터링위원회 설립

출처: 이다예 외 2021, 42; 44 (원자료 (좌) Community District Profiles. <https://communityprofiles.planning.nyc.gov> [2021년 7월 17일 검색]; (우) NYC 2010, 39~41; 95~96; 103~104 내용을 종합하여 정리).

미국 휴스턴시 슈퍼근린주구 협의회(Super Neighborhood Councils)

휴스턴시 88개의 슈퍼근린주구(Super Neighborhoods)는 ‘근린주구 기반 정부’ 개념에 근거하여 도입된 지역 단위이며, 슈퍼근린주구 협의회(Super Neighborhood Council: SNC)는 지역 운영을 지원하는 주민조직

- (도입 배경) 1999년에 시장 주도로 커뮤니티 정책 강화를 위한 슈퍼근린주구 제도를 처음 도입했으며, 이후 실행 과정에서 발생한 주민조직 결정 부진이나 주민조직-행정기관 간 소통 부족 문제 등을 개선하여 현재까지 운영 중임
- (조직 구성) 협의회마다 자율적으로 정한 내규에 맞춰 이해관계자 중심으로 조직을 구성·운영하며, 각 협의회의 회장들은 시 단위에서 슈퍼근린주구 연합(Super Neighborhood Alliance: SNA)을 구성하여 위계 구조를 형성함
- (주요 기능) ① 슈퍼근린주구실행계획(Super Neighborhood Action Plan)을 수립하고, ② 시의 자본증진계획(Capital Improvement Program) 수립을 지원하는 등 지역 문제에 대응하고 서비스를 개선하는 기능을 수행함
- (운영 방식) 협의회는 매월 정기회의를 개최하여 안건을 논의하고 해당 내용을 주민들과 공유하며, 슈퍼근린주구 연합 역시 매월 회의를 진행하여 커뮤니티의 안건을 시에 전달하고 주요 이슈에 대한 의견을 조정함

슈퍼근린주구 협의회는 자율성이 강한 주민조직이기에 지역 특성을 반영하기 쉬우며, 위계 구조를 갖춰 협의회와 연합으로 이어지는 의견 반영 구조를 갖춘 것이 이점이나, 조직별 운영 격차가 크다는 한계도 존재함

표 3 휴스턴시 슈퍼근린주구 현황(2021년)과 슈퍼근린주구 협의회의 주요 기능

주요 기능	책임 사항
슈퍼근린주구실행계획(SNAP) 수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안된 사업의 우선순위를 반영하여 실행계획 작성 • 작성한 실행계획은 시의 관련 부서에서 검토 • 도시설계, 환경, 교육 및 여가시설, 노인 관련 문제를 다룸
슈퍼근린주구 연합에 실행계획(SNAP) 제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슈퍼근린주구 연합은 각각의 실행계획을 시장과 시의회에 제출하는 연간 보고서 내용에 포함 • 해당 내용은 CIP 사업 목록 작성 시 반영
자본증진계획(CIP) 공청회 개최 및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의 CIP 수립을 위한 과정 지원

출처: 이다예 외 2021, 49; 52의 표 재구성 (원자료 (좌) Houston Super Neighborhood Alliance. <https://www.facebook.com/SNAHouston> [2021년 7월 18일 검색]; (우) Houston code Sec.33-312-(b)).

경기도 수원시 도시정책 시민계획단

수원시 도시정책 시민계획단은 도시계획 및 정책 이슈에 대한 주민 의견을 수렴하고 시민 갈등을 조정하는 수원시의 대표적인 거버넌스 기구

- (도입 배경) 2012년 ‘2030 수원도시기본계획’ 수립과정에서 시민참여 강화를 위해 시민계획단을 처음 운영했으며, 이후 도시계획 조례에 시민계획단 운영 근거를 마련하고(2014년), 「수원시 도시정책 시민계획단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하여(2019년) 구성과 기능을 정립하는 등 시민계획단의 위상과 역할을 명확히 함
- (조직 구성) 시민계획단은 2년 임기의 무보수직으로 성별과 연령을 고려하여 500명 이내로 구성하고(2021년 기준 성인 300명, 청소년 100명), 원활한 운영을 위해 공무원과 시민으로 구성된 운영위원회를 별도 구성함
- (주요 기능) ① 도시기본계획 참여(미래상 논의, 정책 발굴 등)와 ② 도시계획·정책에 대한 의견 제시 기능을 수행하며, 운영위원회를 중심으로 주요 이슈를 선별한 후 원탁토론회에서 의견을 제시하는 형태로 활동이 이루어짐
- (운영 방식) 수원시의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받아 운영되고, 정책 논의가 필요한 경우 운영위원회에서 안건과 회의 개최방안에 대한 사전 회의를 진행한 후 연 1~2회 정도 원탁토론회를 진행함

제시된 의견이 시 정책에 상당수 반영되면서 시민계획단의 위상이 높아지고 행정에 대한 신뢰가 상승하는 효과를 얻었으나, 조직 규모가 크고 시간·비용상 제약이 존재하여 다양한 주제로 충분한 논의를 진행하기는 다소 어려움

표 4 수원시 도시정책 시민계획단의 논의 주제와 원탁토론회 모습

날짜	논의 주제	
2014.08	수원역 롯데몰 개점 관련 원탁토론회	
2014.10	수원컨벤션센터 건립 관련 원탁토론회	
2015.10	성매집결지 정비 및 노면전차 활성화 등과 관련된 원탁토론회	
2016.09	영흥공원 조성사업 관련 원탁토론회	
2017.11	2030 수원시기본계획(변경) 관련 원탁토론회	
2018.11	수원형 스마트시티 및 서수원 발전방향 관련 원탁토론회	
2019.11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도시계획 방향 관련 원탁토론회	



출처: 이다예 외 2021, 58-59의 표와 그림 재구성 (원자료 (좌) 수원시청. <https://www.suwon.go.kr>의 도시계획 시민계획단 관련 공고문 참고; (우) 수원시 포토뱅크. <http://photo.suwon.go.kr> [모두 2021년 7월 20일 검색]).

세종특별자치시 주민자치회(마을계획단)

주민자치회는 풀뿌리 자치의 실현을 목표로 하는 주민조직으로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에 근거하여 읍·면·동 단위에 설치되고 자체 조례에 따라 지역 행정에 대한 의사결정 권한을 가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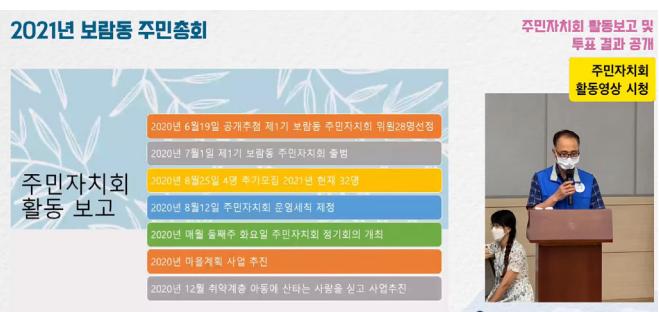
- (도입 배경) 세종시는 지역 발전을 위한 주민자치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2021년 3월 전국 광역자치단체 중 최초로 전체 행정구역에 주민자치회를 구성하여 주민자치 기반을 확보함(세종특별자치시 2021)
 - (조직 구성) 세종특별자치시 주민자치회는 공개 모집과 공개 추첨과정을 통해 선정된 주민 10~50명으로 구성되며, 2년 임기의 주민자치회 위원으로 선정된 후에는 총 12시간의 관련 교육을 이수해야 함
 - (주요 기능) ① 마을계획(마을 발전 및 활성화 관련 사항, 분과별 추진 사업 관련 사항 등) 수립, ② 주민총회(업무 보고, 마을계획안 및 읍면동 예산 사업 확정 등) 개최, ③ 주민참여예산 협의 등이 있으며, 이 외에도 도시계획 참여와 자문(2040 세종도시기본계획 시민참여단 활동, 지구단위계획 관련 자문) 기능을 수행함
 - (운영 방식) 세종시와 읍·면·동 주민센터의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받아 운영되며, 매월 정기회의를 진행하여 주요 안건을 논의하고 연 1회 개최되는 주민총회를 통해 주민들에게 활동 내용을 종합하여 알림
- 읍·면·동 수준에서 활동하여 지역과 밀착되어 있고 주민자치 협의·실행 구조가 명확하여 성과가 뚜렷하다는 이점이 있으나, 주민총회 외에는 주민들과 직접 교류하거나 정보를 공유할 기회가 부족하다는 한계도 존재함

표 5 2020년 주민자치회 마을계획안 선정 사업 예시

읍·면·동	1순위 선정 사업	읍·면·동	1순위 선정 사업
전의면	전의면 꽃길 조성사업	고운동	남측 실개천 쉼터 그늘막 설치
조치원읍	조치원 핫플레이스 발굴 및 홍보	한솔동	통통 첫마을 벼룩시장
장군면	나눔 주차장 조성	보람동	보람동 힐링걷기축제

출처: 이다예 외 2021, 65 (원자료는 세종사회적경제공동체센터 2020, 9).

그림 2 주민자치회 정기회의 및 주민총회 개최 모습



출처: 이다예 외 2021, 67 (원자료는 (좌) 세종특별자치시청(<https://www.sejong.go.kr/bbs/R0129/view.do?bbsId=R0129&nttId=B000000046016Mk3gC0t>) [2021년 7월 21일 검색]; (우) Youtube 세종시 보람동 주민총회(<https://www.youtube.com/watch?v=tjYcmjhgPRw&t=3181s>) [2021년 7월 11일 검색]).

3

커뮤니티 보드의 도입과 운영 방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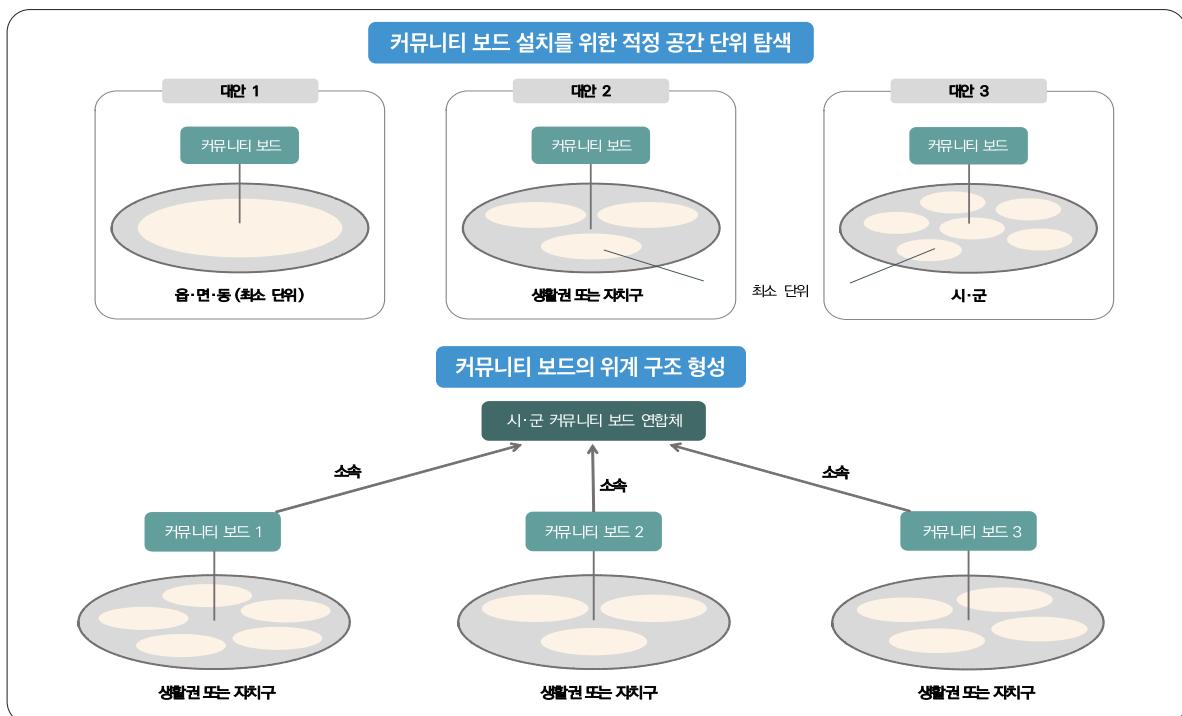
커뮤니티 보드는 ‘특정 공간 범위를 대상으로 설치되어 도시계획·개발 사안에 참여하거나 협의 및 자문하는 주민대표기구’로 정의할 수 있으며, 지자체 차원에서 주민참여를 강화할 목적으로 적정한 공간 범위를 설정하여 커뮤니티 보드를 설치·운영하되 ‘권한 부여’, ‘참여 확대’, ‘정보 공유’에 초점을 두어야 함

- (권한 부여) 도시계획·개발 사안에 대한 참여, 협의, 자문 등의 권한을 부여함으로써 주민참여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주민들의 실질적 영향력을 높일 수 있도록 함
- (참여 확대) 커뮤니티 보드 내에 다양한 계층의 참여를 보장하여 대표성을 갖추도록 하고 구성원 외에도 일반 주민들과 지속적으로 소통하여 의견을 수렴하는 창구로서 기능하도록 함
- (정보 공유) 주민들의 삶과 밀접한 도시계획 정보를 공유하여 주민들의 관심과 이해를 높이고 참여를 활성화하도록 함

커뮤니티 보드는 다양한 공간 단위에서 운영될 수 있으므로 지자체별로 가장 적합한 공간 단위를 탐색하여야 하며, 도입 시에는 새로운 주민조직을 신설하거나 기존 주민조직을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음

- (공간 단위) 주민과의 밀착성이나 기능 수행 편의성을 고려했을 때 최소 구성 단위로는 읍·면·동이 가장 적합하고, 지역의 상황에 따라서 여러 읍·면·동을 포괄하는 공간 범위를 선택하는 것도 가능함
 - 주민자치 기반이 잘 갖춰져 있고 도시계획 업무가 많은 대도시라면 읍·면·동 수준이 적합한 반면, 충분한 규모의 주민참여가 어렵거나 관련 업무가 적은 지역이라면 생활권 범위나 시·군 수준에서의 운영을 고려하도록 함
 - 또한, 여러 공간 층위에서 맞춤형 기능을 수행하며 작동하도록 위계 구조를 형성하는 것도 바람직함
- (도입방안) 기존 주민조직의 현황과 기능을 살피고 활용 가능성을 검토하여 새로운 주민조직을 신설하는 방안과 기존 주민조직의 기능을 확대하는 방안 중 더 나은 것을 선택하여야 함
 - 커뮤니티 보드를 신설하는 경우 새로운 운영기준을 정립하고 기존 주민조직과 중복되는 기능을 조율하여야 하며, 기존 주민조직을 활용하는 경우 커뮤니티 보드의 성격에 맞춰 해당 조직의 구성·기능을 보완하는 것이 필요함

그림 3 커뮤니티 보드의 공간 단위 설정



커뮤니티 보드가 대표성을 갖추도록 적정 수준의 규모와 구성 방안을 설정해야 하며, 주민참여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게 적절한 역할을 부여하고 운영 방식을 결정해야 함

- (규모·구성) 참여의 용이성을 고려한다면 커뮤니티 보드의 규모는 20~50명 정도가 적정하며, 구성원은 성별·연령·직종 등을 고르게 하여 대표성을 확보하는 것이 바람직함
 - 운영진을 구성하여 안건 결정이나 회의 소집 등의 역할을 담당하도록 하고 필요한 경우 분과위원회를 운영함
- (주요 기능) 기본적인 기능은 ① 도시계획(도시기본계획, 생활권계획, 마을계획 등) 수립과정 참여, ② 도시계획·개발 안건에 대한 협의 및 자문, ③ 일반 주민 대상 도시계획 정보제공 및 의견수렴 정도로 설정하고, 구체적인 사항이나 추가적인 기능은 지자체에서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함
- (운영 방식) 월 1회 이상 정기회의 및 공청회를 개최하여 다양한 안건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거나 정보를 제공하며 의견을 수렴하도록 하되, 원활한 역할 수행을 위해 관계기관의 적극적인 지원이 보장되어야 함
 - 정기회의는 구성원 중심으로 커뮤니티 보드의 운영이나 주요 안건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이며, 공청회는 특정 안건에 대해 주민들과 정보를 공유하고 공개적으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자리로 일반 주민들의 참여를 독려하고 회의록 등의 정보를 공개함으로써 커뮤니티 보드 활동의 개방성과 투명성을 확보해야 함

표 6 도시계획·개발 사안별 커뮤니티 보드의 역할 예시

구분	도시기본계획	도시관리계획	기타 도시계획 관련
① 도시계획수립 참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계획수립과정 참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계획목표·전략 - 생활권·부문별 계획 등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시재생 등 계획 참여 • 생활권·마을계획 수립 (소지역 조직의 경우)
② 주요 안건 협의·자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계획안 검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계획안 검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용도지역·지구 지정 - 도시계획시설 결정 - 지구단위계획 결정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시정비·재생, 개발행위 안건 등 검토 • 도시정책(제도) 검토
③ 정보제공·의견수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계획 방향·내용 공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계획 방향·내용 공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시 정책·이슈 공유

출처: 이다예 외 2021, 85.

4

커뮤니티 보드 도입·운영을 위한 정책제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관련 지침에 커뮤니티 보드 도입·운영의 법적 근거 마련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커뮤니티 보드 관련 조항을 신설하거나, 주민참여 관련 조항에 지자체 차원에서 커뮤니티 보드를 운영하여 주민참여 절차를 수행할 수 있다는 내용을 추가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음
 - 커뮤니티 보드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제시하기보다는 지자체에서 자율적으로 구성·운영할 수 있으며, 원활한 운영을 위해 세부적인 지침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내용 정도를 제시하는 것이 적합함
- 또한, 법 개정 사항에 맞춰 「도시·군기본계획수립지침」, 「도시·군관리계획수립지침」, 「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 등에도 커뮤니티 보드를 통한 주민참여 내용을 추가할 필요가 있음

지자체 차원에서 커뮤니티 보드의 운영과 관련된 별도의 조례 또는 지침 마련

- 개별 조례를 마련하여 설치 근거와 운영 방침을 제시하는 방안이 가장 바람직하며, 도시계획조례 등에 설치 근거를 제시하고 운영 지침을 별도로 작성하는 것도 가능함
- 조례 및 운영 지침에는 커뮤니티 보드의 설치 목적과 운영원칙, 주요 기능, 구성과 운영 관련 사항, 커뮤니티 보드와 관계기관 책무 등의 내용을 포함함으로써 커뮤니티 보드의 원활한 운영이 가능하게 하여야 함

다만, 단기적으로는 커뮤니티 보드에 간단한 자문 또는 의견 청취 수준의 기능을 부여하여 시범 운영한 후, 커뮤니티 보드의 위상과 역량이 어느 정도 향상된 이후 기능을 확장할 필요

- (1단계: 수동적 참여) 도시계획 수립 시의 단순 참여나 주요 정책에 대한 의견 제시 기능을 수행하고, 논의 안건은 담당 공무원 또는 커뮤니티 보드를 지원하는 전문가와 운영진이 함께 선별
- (2단계: 공공과 협력) 도시계획 수립 시의 지속적 참여와 모니터링, 각종 도시계획 결정에 대한 자문과 의견 제시, 주민들과의 관련 정보 공유 기능 수행
- (3단계: 주도적 참여) 도시계획 수립을 주도하거나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다루는 각종 결정·허가 안건에 대해 공식적인 의견을 제시하며, 필요한 경우 일반 주민과 안건을 공유하고 투표 등을 통해 결정에 관여

표7 커뮤니티 보드의 단계별 기능 확장 예시

구분	1단계	2단계	3단계
참여 수준	낮음 (공공주도의 수동적 참여)	중간 (공공과의 협력)	높음 (주도적 참여)
주요 기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계획수립 시 단순 참여 • 주요 정책에 대한 의견 제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계획수립 시 적극적 참여 • 각종 안건 자문·의견 제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계획수립 주도 및 적극 개입 • 각종 결정·허가 안건에 대한 공식적 참여와 의견 제시

출처: 이다예 외 2021, 86.

참고문헌

- 수원시청. <https://www.suwon.go.kr> (2021년 7월 20일 검색).
- 수원시 포토뱅크. <http://photo.suwon.go.kr> (2021년 7월 20일 검색).
- 세종특별자치시청. <https://www.sejong.go.kr/bbs/R0129/view.do?bbsId=R0129&nttId=B000000046016Mk3gC0t> (2021년 7월 21일 검색).
- 세종사회적경제공동체센터. 2020. 2020 시민주권대학 마을계획단 사례집. 세종: 세종사회적경제공동체센터.
- 세종특별자치시. 2021. 세종시 읍·면·동 주민자치시대 열다. 3월 29일, 보도자료.
- Community District Profiles. <https://communityprofiles.planning.nyc.gov> (2021년 7월 17일 검색).
- Houston Super Neighborhood Alliance. <https://www.facebook.com/SNAHouston> (2021년 7월 18일 검색).
- NYC. 2010. Handbook for Community Board Members.
- Youtube 세종시 보람동 주민총회. <https://www.youtube.com/watch?v=tiYcmjhgPRw&t=3181s> (2021년 7월 11일 검색).
-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법률 제18473호, 2021년 10월 8일 일부개정).
-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31961호, 2021년 8월 31일 타법개정).
- [해외법률] Houston code

※ 이 브리프는 “이다예·최정윤·김중은·서형주. 2021. 시민참여 도시계획 실현을 위한 커뮤니티 보드 도입·운영 방안. 세종: 국토연구원”의 결과를 정리한 것임.

- **이다예** 국토연구원 도시연구본부 부연구위원
(sibyun@krihs.re.kr, 044-960-0234)
- **김중은** 국토연구원 도시연구본부 연구위원
(jekim@krihs.re.kr, 044-960-0235)

• **최정윤** 인천대학교 부교수(국토연구원 前 부연구위원)